

한국인의 갈등의식과 갈등조정방식

<요약>

한국인의 갈등의식과 갈등조정방식

윤인진
고려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갈등에 관한 의식과 갈등해결방식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갈등이 만연하고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데는 갈등 당사자들간에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합의하고 조율하려는 의식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으로 1,500명의 한국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인의 갈등에 대한 의식, 일상생활에서의 갈등수준, 갈등해결방식, 공익의식의 수준과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인은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수준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2%에 불과하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6.7%,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91.1%에 달했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89% 포인트에 달했다. 더욱이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사회갈등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완화되었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

사회갈등 영역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는 계층간 갈등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 지역갈등, 노사갈등, 이념갈등, 정부-지역주민 갈등, 세대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갈등을 해결하려는 범사회적 차원의 노력은 우선적으로 계층간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 외에 이념간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경제개방(한미 FTA 등)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자, 환경보호자와 환경개발자간의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인은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서로 자신만의 이익이나 주장만을 앞세우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한국인들이 압축적 근대화를 겪으면서 전통적 연고주의와 온정주의를 유지한 채 보편적 시민의식을 내재화하지 못한 것이 사회갈등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국인들도 동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갈등의 책임소재에 대해서 언론이 가장 책임이 큰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중앙정부, 여당, 야당, 대통령과 같은 정치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갈등에 대한 책임에

도 불구하고 언론, 여당, 야당은 갈등해소 노력을 가장 하지 않은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대통령은 언론, 여당과 야당에 비교해서 갈등해소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러 집단 중에서 갈등해소 노력을 가장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시민단체이다.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고 국가부문과 시장부문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할 때 한국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공익차원의 갈등조정형적인 시민단체들의 역할을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사회갈등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회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이나 세력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즉 사회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라기보다는 관리를 잘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회갈등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잘 해결되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등이 잘 해결되어도 사회적 낭비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많았다.

갈등해결의 방법에 대해서는 갈등영역이 공공영역인지 사적영역이지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진다. 국가기관이나 국가정책과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문가 등 제3자를 통한 조정과 화해가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으로 인식되고 그 다음으로 법적 해결이 모색된다. 사기업이나 사적 기관과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전문가 등 제3자를 통한 조정과 화해가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그 다음으로 법적 해결이 모색된다. 하지만 가족이나 이웃간의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끝까지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으로 전문가 등 제3자를 통한 조정과 화해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갈등의 경우에 전문가 등 제3자에 의한 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갈등조정 전문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들의 양성과 활용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 질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갈등을 합의에 의거해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주체들이 사익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공익의식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인들은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 이상의 공익의식을 보이고 있지만 특별히 재산세의 분배, 사회복지 목적의 세금, 사회협오시설로 인한 집값 하락 등과 같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의 공익의식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는 한국인들이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익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자신과 자기 집단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차원의 갈등조정형적인 시민단체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민주노총과 같은 집단이익추구형, 경실련과 환경연합과 같은 사회운동형,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같은 지원형적인 시민단체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국가와 자본,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전횡으로부터 사회약자층을 보호하고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시민단체들이 활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단체들이 사회의 제3섹터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별 사회집단들 위에 서서 공익적 차원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지원형적 시민단체들과 지역종합사회복지관들에 갈등조정 기능을 추가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 가정법률상담소, 이주노동자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은 상담, 교육, 의료 지원, 긴급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원 기능만을 수행해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부, 한국인 사용자와 외국인 피고용자 등과 같은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지원형적인 시민단체들과 종합사회복지관들에 갈등조정사 또는 갈등조정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보다 전문화된 갈등 조정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갈등조정공익재단'(가칭)과 같은 민간기구를 설립하여 다양한 갈등주체들간의 갈등을 전문가들이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다양한 사회갈등을 이해·분석하고 갈등을 조정·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시행중인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이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제시된 갈등영향분석,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의 진행,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될 실용전문인력과 사회갈등을 학문적으로 진단·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능력을 갖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중심대학과 국책연구원 및 교육기관에서 갈등연구조정센터를 설립하고 갈등연구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갈등연구조정학회'(가칭)와 같은 연구자 및 조정전문가들이 학술단체를 설립하여 갈등연구 및 조정기술을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문화된 갈등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국가 또는 학회가 갈등조정사 또는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증을 부여하여 갈등조정인력의 자격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익에 대한 국민의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포함한 동양적 사고에서는 공익과 사익이 별개의 것이며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사익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것으로서 공익을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서양의 공화주의에서는 공익을 사익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한 차원 높은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사익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개명된 사익(enlightened self-interest)이 공익이라고 인식한다(박세일, 2001).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가 보장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공익과 사익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공익을 위해 사익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통적인 사고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공화주의적 공익의식을 국민들이 내재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사익을 초월한 공익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박세일(2001)은 전문가들(학자 등의 이론전문가와 전문경영인, 기술관료 등의 실무전문가)이 공익이 무엇인지를 조사 연구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전문가들의 판단과 정책제안을 놓고 국민다수가 참여하는 개명된 공론화(public deliberation) 과정을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개명된 공론화란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신들의 사적 이익주장을 자제하고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공익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 민주적으로 진술하는 것"이다(전게서, 68). 필자는 박세일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고 앞으로의 공공갈등 해결방식으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에 의한 문제해결의 제시와 이후의 공론화 과정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부대운하 건설사업에 적용해보면 첫 번째로 환경, 건설, 경제전문가들이 대운하 건설의 가능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객관적, 실증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

하고, 두 번째로 이를 놓고 국민다수가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굳이 필요할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인의 갈등의식과 갈등조정방식

윤인진
고려대학교

제1장 갈등사회의 도전과 사회통합

1. 갈등사회의 도전

근대 산업사회에서 사회갈등은 계급 및 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경제적 영역에서 노동계급과 자본 간의 갈등, 정치영역에서 민중과 억압적 국가 간의 갈등이 주요 갈등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탈근대사회 혹은 현대사회에서 사회갈등은 계급 및 계층 외의 성, 연령, 세대, 종교, 인종 및 민족, 장애 여부, 성정체성 등 다양한 사회문화 영역에서 발생한다. 또한 서구 선진사회에서는 성, 인종, 계층/계급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갈등과 불평등의 복합성과 중층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수없이 다양한 일상적 이슈들을 정치화시켜 새로운 갈등구조가 생산되어 갈등의 일상화와 제도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학자들은 「사회운동사회」 혹은 「갈등정치」 등으로 개념화한다. 필자는 갈등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된 현대사회를 '갈등사회'로 규정한다. 현대 갈등사회에서는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한다.

서구 학자들은 현대사회의 변동과 전망을 탈산업사회, 포스트모던 사회, 위험사회, 네트워크 사회로 규정한다. 이런 변동추세들은 한국사회에서도 일정 부분 관찰되나 현 단계에서 갈등사회 개념은 한국사회의 근본적 경향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상위 개념이다.

갈등사회에서 갈등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되는 것이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보다 높은 수준에서 사회를 통합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간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 통합 및 합의가 잘된 국가들이 국가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갈등을 잘 관리하여 분산된 사회적 에너지를 통합할 필요가 크다.

근대 산업사회에서 갈등은 정부가 통제 및 관리의 주체였다. 그러나 갈등사회에서는 더 이상 정부만으로 갈등 관리가 어렵다. 다양한 사회집단이 갈등의 주체이자 갈등관리의 주체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과 협치(協治)가 필요하다.

2. 사회갈등 관리와 사회통합 문제의 대두

한국에서 사회갈등, 특히 이념갈등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장기간 지속된 남북한 간의 냉전적 대립구조와 이로부터 비롯된 냉전문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냉전문화 속에서 한국 사회는 배제와 강요를 내용으로 하는 강제적 동질화의 과정을 겪었고, 이로 인해 사회 내의 차이와 다양성들이 대화와 협력의 과정을 발전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적 상황을 야기하였다.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친미주의와 반공주의를 형성하여 장기간 진보성향의 정치 세력의 형성을 억제하였다. 이로 인해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요구가 억제되었다. 친미·반공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미·민족주의가 강화되었고,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반미·민족주의는 억압을 받고 저항적 성격을 띠고 비공식적 과정을 통해 확산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친미·반공문화와 반미·민족주의적 반문화의 대립구조는 대화와 타협의 관계가 아닌 구조적인 갈등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손호철, 2004; 조한범, 2005).

1960년대 이후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압축적 산업화와 근대화는 경제성장 이외의 다른 가치들과 목표들은 도외시하고 반대 의견들은 철저히 억압되었다.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근대적인 사회구조와 제도양식, 가치관은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부과되었고, 시민사회내의 자생적인 재생산구조는 대단히 취약하였다. 이 시기에 사회의 모든 영역은 '경제성장을 통한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희생되었다. 민주주의, 인권, 교육, 의료 및 건강, 환경, 복지, 문화 등은 안보와 경제성장 논리에 의해 뒷전으로 밀렸다.

1987년의 민주화 이행은 국가 일방주의와 성장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정치경제적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다원적 자율성을 제고할 최초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탈권위주의 시대에 적합한 합리적이고 민주적 권위구조 형성에 실패하였다. 그리고 정보사회의 역동성은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간의 상호동화 작용을 촉진시키면서 공익과 사익의 구분을 어렵게 만들고 그 결과 정부개입에 의한 사적 관계 조율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부문이 사회통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5).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경제성장에 걸맞은 사회 시스템의 정착이 지연되면서 각 사회집단들이 나름의 문제해결 방식을 추구하고 있으나 합리적 협상과 이익의 조화보다는 감정적 대립과 이익의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모습이 노출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지형은 전통적인 계급과 시민운동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젠더, 세대, 교육, 소수자 등 사실상 사회 전방위에 걸쳐 있다. 한국사회의 갈등의 특징은 빈도측면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속적 측면에서 끈질기고 오래가며, 갈등의 형식에서 집단 행동 형태로 나타나고, 빈번히 불법적이고 과격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갈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갈등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점차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 발생하는 갈등은 과거의 그것과는 다르고 또한 상당수의 갈등은 국가의 관리능력 범위 밖에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사회갈등이 효율적으로 조정되고 관리되지 못함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갈등주체들이 신뢰를 통해 국가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기보다는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에 몰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형국책사업들이 표류하고 국가의 대외신임도가 추락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분산된 사회적 에너지를 통합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2005년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해소방안 연구』에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2%가 우리 사회갈등 양상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70%가 이런 갈등이 사회발전 또는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갈등의 심각성은 계층간 갈등>지역갈등>노사갈등>세대간 갈등>교육갈등>이념갈등>환경갈등>남성과 여성간 갈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와 전문가의 부족, 갈등관리 관련 연구와 교육(인적자원 양성) 체계의 미비,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부재 등 갈등관리 인프라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그리고 서로간의 다름에서 오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한국사회를 갈등사회라고 정의하는 것은 단지 갈등이 빈번하고 고질적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갈등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과 제도 안에서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은 억압된 갈등이 표면으로 증구난방으로 표출하지만 그것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갈등관리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과도기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미국도 1970년대까지 댐 건설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공공갈등을 경험하였지만 1970년대 중반에 중재를 통한 갈등조정제에 성공하고 미국 법무부가 1978년에 3개의 Neighborhood Justice Center 설립을 지원하고, Minnesota, Connecticut, Ohio 주에서 NIS 합의안이 도출되고, 1983년에 National Institute of Dispute Resolution (NIDR)이 설립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갈등조정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김동영, 2006).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도 합리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국민의 의식이 선진화되면 현재의 폭력적이고 소모적인 사회갈등이 생산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합리적인 갈등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 관련 법, 제도, 절차 등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시스템 차원의 접근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갈등조정문화를 만들어가는 의식문화적 접근이 동시에 전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갈등에 관한 의식과 갈등해결방식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갈등이 만연하고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데는 갈등 당사자들간에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합의하고 조율하려는 의식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족주의, 연고주의, 집단주의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집단이기주의로 변모하여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해당사자 간에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합리적인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사회적 합의에 의거한 갈등조정과 해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집단이기주의를 넘어서 공공선을 인정하고 추구하려는 공익의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무조건 반대

하고 보자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행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갈등에 대한 인식, 일상생활에서의 갈등수준, 갈등해결방식, 공익의식의 수준과 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인의 갈등조율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 문제해결과 정책지향적 연구

사회갈등에 대한 국내의 문헌들은 갈등에 대한 고전적 시각들, 즉 사회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며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편재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갈등사회'의 출현과 그 변화양상, 그리고 '갈등 관리'의 필요성을 기본적으로 논하고 있다. 또한 많은 논자들이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탈산업화, 근대와 현대, 그리고 탈현대기 공존하고 있으며 그 독특한 역사적 맥락이 사회 갈등의 중층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갈등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외국의 연구들이 갈등의 제 측면들을 다양한 방향과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다분히 문제해결 지향적이고 정책 지향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핵심적 갈등 상황의 성격이 '정치의 민주화'나 '산업의 민주화'로부터 공공사업이나 정책 결정을 둘러싼 '정책의 민주화'로 변하면서 공공정책과 관련된 사회갈등이 다수 야기되기 때문이다(이영희, 2005). 또한 갈등의 성격이 변화함과 동시에 최근 이러한 유형의 사회갈등이 관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간의 연구들은 이러한 현실적 필요에 즉각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매우 실용적인 방향을 지향해온 것이 사실이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갈등이란 개인, 집단, 공동체, 계층 간에 지위, 권력, 특권, 희소자원 등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상호작용의 한 형태로 가치와 목표만이 양립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얻고자 하는 수단 또한 양립 불가능한 상호작용을 가리킨다(한국여성개발원, 2005: 11). 갈등은 해결가능성에 따라 관리가능하고 해결가능한 갈등(manageable and solvable conflict)과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갈등(intractable and persistent conflict)으로 구분될 수 있다(Burgess and Burgess, 2003). 대체로 물질적인 이해관계와 관련한 갈등은 전자에 속하고 가치와 문화 차이에 의한 갈등은 후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갈등은 다시 갈등원인에 따라 물질적 욕구를 중심으로 발생된 욕구갈등(needs conflict)과 가치관, 이념, 종교, 문화 차이에 의한 가치갈등(value conflict)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갈등은 갈등발생 요인에 따라 인종, 종교 혹은 민족의 차이에 따른 정체성에 기초한 갈등, 자원의 통제에 대한 경쟁 혹은 부의 분배와 관련된 갈등, 권력 혹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접근의 불평등한 배분과 연계되어 있는 행정관리와 관련된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5: 15-17).

사회갈등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분석 수준에 따라 구분하면 거시적·구조적 접근과 미시적·사회심리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정치경제, 이념, 이해관계의 충돌에 초점을 두고 있고 후자는 의식, 가치관, 문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구조적 접근

기존의 거시적인 연구들은 한국사회의 갈등의 구조적 조건들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예를 들어, 장상환(2003)은 다양한 사회갈등들을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의 결과로 설명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2001)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 과정은 식민통치와 분단, 전쟁, 군사쿠데타와 권위주의 지배에 의해 본질적으로 왜곡된 형태로 한국사회내의 구조적 상흔(structural trauma)을 안겨준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형성 과정이 국가의 정당성을 심하게 훼손하였고, 이러한 구조적 조건 하에서 사회구성원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깊이 내면화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여 통제 불능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문기(2004) 또한 사회갈등의 외적·내적 조건을 설명하면서 경제성장 이면의 구조적 배제와 집단·지역이기주의가 합쳐져 흑백논리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고착화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민주화 이후 갈등은 급격히 분출 및 확산되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는 악화되어 있고 갈등 관리 방법은 효율성마저 상실하고 있어 더욱더 갈등의 확산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정치권력의 정당성 문제와 공적 신뢰의 상실, 체제 합리성 문제는 기존 연구에서 갈등의 주요한 요인으로 빈번히 언급되고 있다(박길성, 2003; 박기덕, 2002).

과도한 이념갈등은 불관용의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념성향의 차이는 단순히 이념의 분화, '차이' 그 자체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념이 다른 상대방을 '공존'이 아닌 '박멸'의 대상으로 보는 투쟁의 문화가 합리적인 정책 논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한준·설동훈, 2006). 언론의 무책임함과 정치의 무능도 자주 지적된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은 논쟁의 장과 의사소통의 건전한 통로가 되기보다는 갈등을 증폭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것으로 비판받는다. 의료분쟁 보도 프레임 분석을 통해 언론이 갈등을 어떻게 '규정' 하는가를 연구한 문헌에 따르면, 우리 언론은 기존질서를 옹호하는 의미생산에 치중하며 사건 중심의 프레이밍으로 갈등의 일탈적 측면만을 강조한다. 또한 갈등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부재하고 대립구도 그 자체만을 이슈화하여 갈등집단을 일탈적 측면만을 부각시킨다(양정혜, 2001). 반면 언론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을 충분히 반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호한 태도가 갈등을 반복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한준·설동훈, 2006). 또한 정당이 갈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결하여 체제 내에서의 해결을 도모하는 영국이나 사민주의에 기초한 합의정치를 통해 사회통합을 꾀하는 독일과는 달리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은 생산적 논의를 통해 수렴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계속한다(강원택 외, 2006).

한편 최근에는 가치나 이념에 따른 갈등보다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어 이들 사례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갈등을 교육계 내부의 이해갈등으로, 각종 선호·혐오시설 유치를 둘러싼 분쟁들을 지역민들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투쟁으로 보고 있는 연구들이 이에 속한다. 정부 주도의 포괄적 갈등 연구들이 거의 이 범주에 속한다(한국여성개발원, 2006). 서문기 외(2001)가 연구한 대표적인 갈등의 7가지 사례들도 주로 갈등 주체들의 이해관계 - 의약분쟁과 협동조합 개혁안, 대기업 규제 등을 둘러싼 이익분배체계, 인사, 지역적 이해 등-를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영희(2005)는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대부분 절차상의 갈등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기술 관료 문화와 시민사회 간의 민주화 격차(democratization gap)가 갈등 분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갈등의 해결에 관한 기존 연구의 태도는 대동소이한데, 그것이 가치(value)갈등이건 이해(interest)갈등이건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통제 불능의 정도까지 치닫는 데에는 체계적 갈등 관리 방안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환경갈등의 현황 및 정책 과제에 대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DAD(Decide-Announce-Defend)로 상징되는 행정 편의적인 정책 결정과 실행을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절차상의 합리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2005)의 정책 제안은 공공사업 실시에 있어서 정부의 일관된 원칙, 시민협의체와 같은 적극적 참여 유도, 정부 내 갈등 관리 전담 기구의 설치하여 갈등사례를 체계화·자료화 할 것, 대안적 분쟁해소(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전문적인 갈등 관리 인력의 양성, 시민사회의 적극 참여 등 '참여거버넌스 인프라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갈등이 조장 확대 되는 것에 주목하면서, 소통의 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집시법의 개혁과 함께 언론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한준·설동훈, 2006).

한편 새로운 사회 갈등 문제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서 찾는 의견도 있다. 대의제는 순차적, 점진적인 갈등 조절 원리이기 때문에 계급이나 이데올로기 같은 전통적 갈등 이외의 조절기제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들이 그것이다. 주성수(2004)는 불안사태를 이러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님비(NIMBY)현상이 내부자들에게는 무력감과 자포자기 상태에서 벗어나는 최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치권능(empowerment) 확보와 행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방안을 심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모색하고 있다. 유럽의 합의모델에 주목한 연구들에 의하면, 한국 사회의 맥락 상 유럽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 하는 것은 사민주의적 합의정치 조차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을 제거하되 사회안전망을 우선적으로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강원택 외, 2006). John Burton(1990) 또한 정치 체계내의 패러다임 이동(Paradigm shift)을 동반한 장기적이고 시스템적인 갈등 사전 해결(Prevention) 방안을 촉구한다.

3. 의식문화적 접근

문화란 그 사회 구성원의 의식적인 모든 영역을 구성하면서도 마치 빙산과 같이 그 전체의 뚜렷한 윤곽을 알 수 없다. 때문에 갈등의 분석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시됨에도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 최소화된 경향이 있다(LeBaron, 2003). 실제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써 제도적 정비에 주력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다양성과 공존에 대한 의식 함양을 촉구하고 있는 수준이다. 예컨대 체제 합리성의 확보를 위해 제도 정비와

함께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합리적 참여를 독려하자는 주장(박기덕, 2002)이나 여러 연구에 늘 등장하는 민주 시민 교육의 강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문화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함께 갈등의 양태를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Ross, 1995).

문화 의식에 대한 보다 미시적인 수준의 연구로서, 직장에서의 관리자의 갈등해결 양태를 비교 연구한 Michael Morris 외(1998)의 연구는 갈등의 요소로서 행위자들의 문화적 가치(cultural value)를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경우 유교적 전통과 순응적(conformity) 가치를 중시하는 특성이 갈등의 폭발을 회피(avoid)하는 전략을 택하게 하며, 개인주의적이고 성과지향적인 미국인의 경우에는 보다 경쟁적인 태도(competing style)로 직장에서의 마찰에 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갈등 회피적 성향(avoid style)은 한국문화에서 나타나는 '집단지향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Marc H. Ross(1995)는 건설적 갈등 사회(constructive conflict society)의 개념을 상정하면서, 갈등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사회의 조건으로서 개인과 공동체의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고 갈등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정비되어 있는 온정적(warm and affectionate) 성향을 꼽고 있다. 한편 최상진 외(1998)등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집단주의는 집단 내 성원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주의적 특성을 지닌다. 또한, 한국인의 삶의 방식은 심정주의적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외부의 객관적 규정보다는 내부의 주관적 기준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동서 가치(Eastern and Western Value)를 자기 편의적으로 선택적 혼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서양식의 합리적인 가치관을 주장했다가 불리할 때는 한국식의 온정주의나 집단주의 가치관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해 당사자들간에 일관된 가치관과 기준이 없게 될 때 갈등해결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임희섭(2007)은 한국사회가 '압축적 근대화'를 경험하여 전통사회, 대중사회, 계급사회, 시민사회의 여러 특성들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으로 인해 현대의 한국인들은 전통적인 공동체를 상실하고서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시민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한 채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같은 전통적인 연고관계에 의존해서 도시생활에 적응해 가는 도시의 촌락인(urban villagers)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Gans, 1968). "개인 혹은 가족과 같은 원초집단을 단위로 해서 '원자화'되고 소외되어 있는 한국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에 의해 경쟁적인 사회환경에 대응해 나가고, 공공의 문제나 쟁점에 대해서는 평소에는 정치적 무관심이나 정치적 냉소주의의 태도로 일관하다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직접 결부된 쟁점에 대해서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행동양식을 취한다"고 진단하였다(임희섭, 2007: 210).

4. 공익의식

공익(公益, public interest)이란 개념은 사회정의와 형평과 같은 개념과 마찬가지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고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김규정(1973)은 공익의 정의를 '사회일반의 이익', '불특정·다수인의 이익', '사회구성원의 평균적 이익'으로 정의하였다. 최창호

(1973)는 공익에 관한 여러 정의들을 종합하여 '일반성을 가진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으로 정의하였다.

공익의 내용 또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립된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공익이란 사익 또는 특수이익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내용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익이란 사익 또는 특수이익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익 또는 특수이익들이 조정된 결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전자의 시각을 실체설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시각을 과정설이라고 부른다(최창호, 1973).

공익과 사익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두 가지 대립된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공익과 사익을 대립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공익이 사회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사익은 자신과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다른 하나는 공익과 사익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상보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김비환(2001)은 '무임승차'의 비유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탈세를 하고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을 때 결국은 사익을 안정되게 추구할 수 있는 토대마저 붕괴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익만을 중요시여기는 태도 역시 정치권력의 독점과 횡포를 가져와서 억압적인 권위주로 타락하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그래서 사익과 공익의 공보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이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에서의 공익에 대한 연구는 사상적 또는 이론적 차원에서 연구된 것들은 있어도 구체적으로 공익의식을 조작화하고 척도로 측정하는 것은 드물다(최창호, 1973; 김비환, 2001; 이승환, 2001). 예외적으로 오만석 외(2003)의 연구는 한국·미국·일본 국민의 윤리의식을 비교하였으나 공익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동양의 윤리관은 인간의 존재론적 의무로서 도덕성을 주장한다. 이것은 서양이 도덕을 개인의 행복 또는 공동선과 결부시키는 공리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무척이나 상이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집단이기주의적 성향이 극명히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관심과 질서의식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공동체 안과 밖을 구분하는 폐쇄적 공동체 의식은 매우 강하게 나타나 집단이기주의를 설명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박종주 외(1992)의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과 공익성 실태를 조사했는데 청소년의 일탈행동 또는 반사회적 행동과 도덕성 및 공익성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2002 월드컵 때 붉은악마를 복잡계의 관점에서 주목하면서 이를 새로운 사회통합의 잠재력으로 파악하는 시각도 있다(김종길, 2005). 즉 정보화 시대, 접속의 시대에는 비생산적이고 인위적인 통합 보다는 갈등의 잠재력과 원심력을 인정하고 비생산적·인위적 통합을 도모하기 보다는 창발적(emergent)인 통합, 자발적이고 설득적인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희섭(2007)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강한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라고 보고 이 두 가지 요소에 따라 한국의 시민사회를 조명하였다. 자율성의 영역에서는 적어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일반 시민들의 참여 정도가 낮고, 재정 자립도가 낮고,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과도한 정치참여 등으로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공

공성의 영역에서는 공익지향적인 NGO나 사회운동단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활동이 활성화 되었지만, 일부 노동조합을 비롯한 각종 이익집단들과 지역사회의 주민조직 등은 여전히 집단이기주의적인 행동양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현상은 한국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사회에서 요구되는 공공정신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부 시민단체들이나 지역주민들이 (1)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익보다 집단이익을 우선하는 이기주의, (2) 집단이익을 비제도적인 집단행동에 의해 과격하게 표출하는 행위, (3)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집단의 이익은 존중하지 않는 배타성, (4) 자신과 자기 집단의 이익을 주장하면서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반시민성들이 한국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선행연구들은 주로 갈등의 주체가 정부와 국민이고, 수준에 있어서는 거시적이며, 갈등 실태 파악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해 갈등 해결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갈등 축인 계급, 이념이나 지역 갈등의 진단과 처방에 있어서 제도적 측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그간의 연구에서 민주적 의식함양, 관용의 태도 등 의식 문화적 측면은 늘 중요하다고 역설되어 왔음에도 보충적으로만 다뤄졌을 뿐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했다. '갈등의 일상화', '갈등사회의 도래'는 비단 뉴스에 보도될 만한 굵직한 국책사업 추진에서의 마찰만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닌바,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일상적이고 미시적 갈등을 다룬 연구가 미흡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일상생활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인의 갈등의식과 갈등해결방법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국인의 공익의식이 부족하고 이것이 사회갈등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경험적으로 공익의식을 측정하고 지표화하는데 소홀했다. 한국인의 공익의식이 부족한지의 여부는 경험적으로 측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단정 지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익의식을 측정하는 척도를 구성하여 경험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제3장 자료와 응답자 특성

1. 자료

본 조사의 자료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한국사회연구소와 BK21갈등사회인재양성교육연구단에서 2007년 11월 사회조사 전문회사인 리서치 21에 의뢰하여 실시한 “한국인의 사회갈등 의식조사”로부터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갈등의식, 갈등해결방식, 공익의식 수준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응답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본 조사의 응답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분포는 총 1,500명의 응답자 중 남자가 50.9%, 여자가 49.1%를 차지하여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면에서 만 20~29세가 25.9%, 30~39세가 28.1%, 40~49세가 27.6%, 50~59세가 18.4%를 차지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60세 이상의 응답자는 표집과정에서부터 제외했기 때문에 표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거주지역별로는 표집에서부터 전국 16개 시도의 인구비율별로 표본을 선정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각각 22.3%와 22.6%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7.7%), 경남(6.3%), 인천(5.6%), 대구(5.3%), 경북(5.3%), 충남(3.7%)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교육수준에서 중학교 학력 이하의 학력 소유자가 2.6%에 불과하고 고등학교 졸업 혹은 중퇴의 학력 소유자가 23.4%에 해당했다. 대학 재학 혹은 중퇴의 비율이 15.5%, 대학 졸업의 비율이 49.4%, 대학원 입학 이상의 학력 소유자 비율이 9%에 달해서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학력 수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월소득 분포는 100만원 미만인 7.3%, 100~200만원 미만인 16.3%, 200~300만원이 23.4%를 차지하고 있다. 300~500만원 미만은 34.9%를 차지하고, 500만원 이상은 18.2%를 차지하였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

	전체	사례수	백분률
성별	남자	765	50.9
	여자	735	49.1
연령	만20~29세	388	25.9
	30~39세	422	28.1
	40~49세	414	27.6
	50~59세	276	18.4
거주지역	서울	334	22.3
	부산	116	7.7
	대구	79	5.3
	인천	84	5.6
	광주	44	2.9
	대전	46	3.1
	울산	35	2.3
	경기	339	22.6
	강원	44	2.9
	충북	45	3.0
	충남	56	3.7
	전북	51	3.4
	전남	53	3.5
	경북	79	5.3
경남	95	6.3	
교육수준	무학, 초등학교 졸업 혹은 중퇴	14	.9
	중학교 졸업 혹은 중퇴	26	1.7
	고등학교 졸업 혹은 중퇴	351	23.4
	대학 재학 혹은 중퇴	233	15.5
	대학 졸업	741	49.4
	대학원 입학 이상	135	9.0
월수입	100만원 미만	109	7.3
	100~200만원 미만	244	16.3
	200~300만원 미만	351	23.4
	300~400만원 미만	284	18.9
	400~500만원 미만	240	16.0
	500~600만원 미만	133	8.9
	600~700만원 미만	60	4.0
	700만원 이상	79	5.3

3. 응답자의 이념성향

선행연구에 따르면 평등이나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보편주의 가치는 소수 집단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소수 집단을 위한 정책을 더욱 지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혜숙(2002)의 연구에 따르면 평등과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보편주의 가치는 북한사람과의 낮은 사회적 거리감, 대북 지원 정책이나 민간교류 정책에 대한 찬성 태도, 지역감정의 원인을 정치인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보수-진보 성향과 같은 가치관은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상학(2004)의 연구에서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 차이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징이나 가족적 배경보다는 정치적 성향 등과 같은 주관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소수자 집단에 대해 가깝게 느끼는 것이다. 황정미(2007)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인종적 배제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성별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보다는 사회적 가치관 변인들이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수-진보 성향과 같은 가치관과 반사회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집단의 공개집회를 허용할 것인가와 같은 관용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보편적 사회적 가치관은 갈등수준에 대한 인식, 공의의식, 갈등해결방식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1) 이념적 성향

응답자의 정치 성향을 조사한 결과 '보통'을 기준으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9.2%,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3.9%로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보다 14.7% 포인트 많았다. 하지만 보수-진보 성향의 평균점수는 0점(매우 보수적)-5점(보통)-10점(매우 진보적)의 범위에서 5.32로 거의 보수와 진보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인의 이념 성향을 조사한 2003년 KGSS(한국종합사회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정치성향을 보수-진보의 차원에서 볼 때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32.2%로 중도 성향을 가진 사람들(25.4%)과 다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24.6%)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KGSS 자료에서는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34.5%)이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31.8%)보다 약간 많았으나 그 차이는 2003년에 비교해서 6.7% 포인트만큼 줄었다. 2006년 국정홍보처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이념성향을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2.4%로 가장 많고,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8.1%,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4.7%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 결과들을 종합하면 한국인의 정치 또는 이념 성향은 보수나 진보로 치우치기보다는 대체로 중도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윤인진·송영호, 2007).

2) 반사회적 집단에 대한 관용도

반사회적 집단에 대한 관용도에 관해서는 2004년 KGSS에서 종교적 극단주의자, 국가전복주의자, 인종민족적 편견소유자와 같이 사회의 안녕과 통합에 위협을 주는 사회집단의 공개 집회를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2007년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에서는 위의 세 집단 외에 동성애자와 같이 비인습적인 성적 지향성을 가진 사회집단의 공개집회를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응답자들은 종교적 극단주의자, 국가전복주의자, 인종민족적 편견소유자, 동성애자들의 공개집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별히 국가전복주의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공개집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다른 사회집단에 비교해서 월등히 높았다. 예를 들어, 2007년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공개집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96.2%인 반면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3.8%에 불과했다. 하지만 다른 집단들에 비교해서 동성애자의 공개집회는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이들이 사회에 덜 위협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반사회적 집단의 공개집회 허용에 대한 태도

(단위: %)

구 분	종교적 극단주의자		국가전복주의자		인종민족적 편견소유자		동성애자	
	2004	2007	2004	2007	2004	2007	2004	2007
사례수	1,313	1,500	1,312	1,500	1,312	1,500	-	1,500
당연히 허용해서는 안됨	25.0	41.9	39.7	61.7	29.6	46.5	-	24.5
허용해서는 안됨	50.8	46.3	47.0	34.5	48.5	46.7	-	36.7
허용해야 함	16.7	10.9	7.5	3.6	15.3	6.4	-	33.3
당연히 허용해야 함	2.3	0.8	1.4	0.2	1.5	0.5	-	5.5
모르겠다/무응답	5.3	-	4.4	-	5.1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평균	1.96	1.70	1.69	1.42	1.88	1.60	-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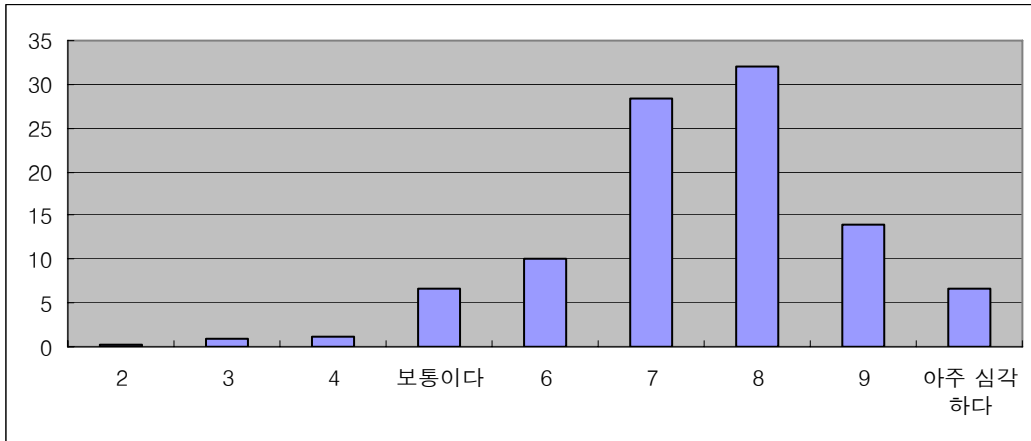
제4장 한국인의 갈등의식

1. 사회갈등수준의 인식

한국인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식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을 10점, 전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을 0이라고 할 때 한국인이 인식하는 평균 사회갈등 수준은 7.5점이었다.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2%에 불과하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6.7%,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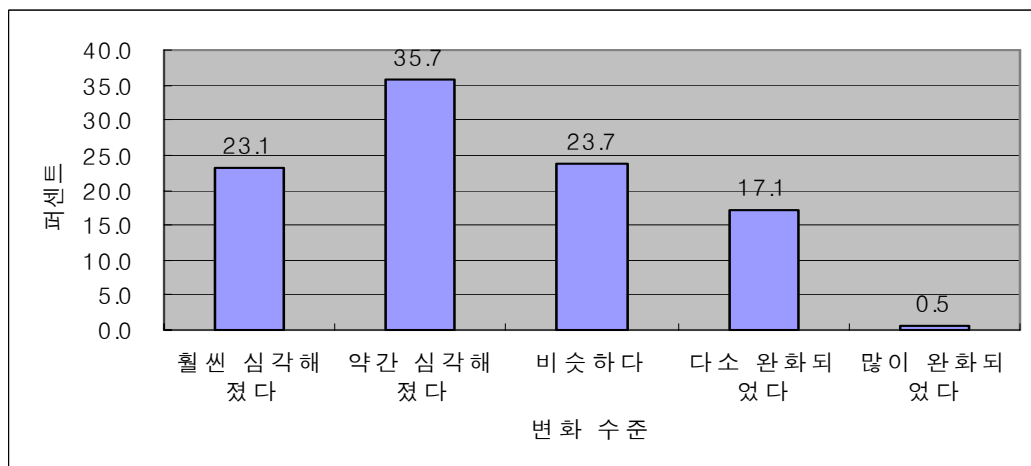
91.1%에 달했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89% 포인트에 달했다. 이런 결과는 2005년 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해소방안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92%가 한국사회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것과 일치한다.

<그림 1> 한국인의 사회갈등수준 인식



한국인은 현재 사회갈등수준이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서 전반적인 갈등수준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10년 전에 비교해서 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7.6%,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3.7%, 더욱 심각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58.8%에 달했다. 이런 결과는 2005년의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해소방안 연구』에서 응답자의 68%가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서 사회갈등수준이 심각해졌다는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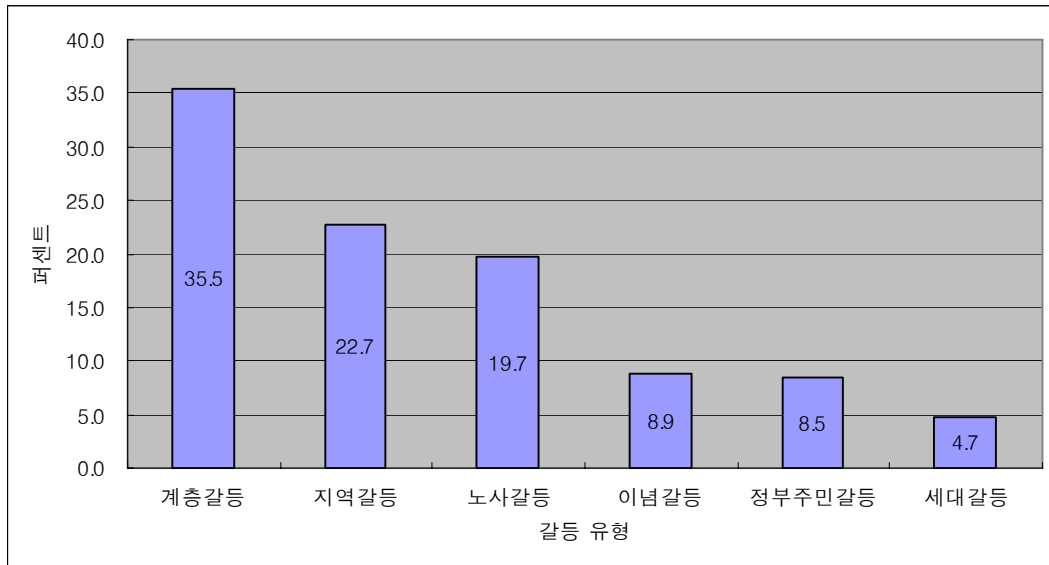
<그림 2> 과거 10년 전과의 갈등수준 비교



2.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

한국인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은 계층간 갈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주요한 갈등으로서 지역갈등, 노사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계층갈등, 정부(혹은 지자체)와 지역주민간 갈등 중에서 계층간 갈등을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35.5%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심각한 갈등으로는 지역갈등이다. 응답자의 22.7%가 지역갈등을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인식하였다. 세번째로 심각한 갈등은 노사갈등이다. 응답자의 19.7%가 노사갈등을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이념간 갈등, 정부(혹은 지자체)와 지역주민간 갈등, 세대간 갈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2005년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해소방안 연구』에서 계층간 갈등>지역간 갈등>노사간 갈등>세대간 갈등>교육갈등>이념갈등>환경갈등>남성과 여성간 갈등의 순서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림 3>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된 사회갈등 유형



각 사회갈등의 수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1>에서 다양한 갈등집단간의 갈등수준을 알아본 결과 여당과 야당간의 갈등(평균 4.36점)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4.24점),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4.14점), 경영자와 노동자(4.07점)간의 갈등수준이 평균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남 거주자와 강북 거주자(3.69점),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3.67점),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3.61점), 영남 지역 사람과 호남 지역 사람(3.6점)간의 갈등수준은 평균 3~4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수준이 높은 집단들이 대체로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된 것이어서 한국사회에서 계층갈등이 가장 심각한 갈등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준다.

〈표 3〉 사회갈등 유형별 갈등수준 인식

(단위: %)

갈등 유형	심각하지 않음	보통	심각함	평균값
여당과 야당	1.5	12.7	85.7	4.36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0.7	9.5	89.8	4.24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1.8	14.9	83.3	4.14
경영자와 노동자	0.7	15.5	83.7	4.07
강남 거주자와 강북 거주자	5.3	33.7	61	3.69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3.7	38.3	58	3.68
노동자층과 중산층	3.5	35.3	61.3	3.67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	7.1	38.3	54.6	3.61
영남 지역 주민과 호남 지역 주민	8.4	38.7	52.9	3.6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	6.7	40.5	52.7	3.59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	7.7	41.5	50.8	3.58
수도권 주민과 지방 주민	9.3	38.9	51.8	3.53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	12.3	48.2	39.5	3.33

주 : 갈등수준은 1='거의 심각하지 않음', 2='심각하지 않은 편', 3='보통', 4='심각한 편', 5='매우 심각함'으로 측정함.

3. 이념갈등의 인식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갈등은 물질적 욕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가치관과 이념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한다. 이념갈등은 현재 한국사회의 균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북한 및 통일문제, 양극화, 고교평준화, 부동산 정책, FTP 협상, 호주제 등에서 보수-진보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질적인 이해관계와 관련한 갈등은 협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가치와 이념의 차이에 의한 갈등은 타협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고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갈등 중 특별한 관심과 해결노력이 필요하다.

한준·설동훈(2006)의 『한국의 이념갈등 현황 및 해소방안』 연구에 따르면 총 응답자 1,200명 중 20.3%가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이 '매우 크다', 34.9%는 '대체로 크다', 36.4%는 '보통', 7.1%는 '대체로 작다', 1.3%는 '매우 작다'고 보고하였다. 즉 응답자의 55%가 이념갈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경제, 환경, 미국, 여성, 교육 등을 둘러싼 이념간의 갈등을 조사한 결과 한준·설동훈(2006)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서 이념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경제개방(한미 FTA 등)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응답자의 73%가 심각하다고 인식), 그 다음으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자, 환경보호자와 환경개발자간의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성의 권리와 교육을 둘러싼 이념갈등은 다른 갈등유형에 비교해서 다소 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표 4〉 이념갈등 수준 인식

(단위: %)

이념갈등 집단	심각하지 않음	보통	심각함	평균값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2.7	31.4	65.9	3.78
경제적 평등을 우선시 하는 사람과 경제 성장을 우선시 하는 사람	2.7	40.9	56.4	3.64
경제개방(한미 FTA 등)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2.7	23.5	73.8	4.0
환경보호를 우선하는 사람과 개발을 우선하는 사람	3.6	31.7	64.7	3.78
반미 세력과 친미 세력	4.7	34.1	61.3	3.73
친북 세력과 반북 세력	6.9	37.2	55.9	3.67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사람과 가부장적 전통을 강조하는 사람	7.9	42.5	49.6	3.53
교육의 경쟁을 강조하는 사람과 교육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	5.9	45.3	48.9	3.53

주 : 갈등수준은 1='거의 심각하지 않음', 2='심각하지 않은 편', 3='보통', 4='심각한 편', 5='매우 심각함'으로 측정함

4. 갈등발생의 원인

한국인은 사회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갈등 당사자들간의 이기주의를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59.7%가 서로 자신만의 이익이나 주장만을 앞세우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다음의 원인으로 '기준에 가진 사람이나 집단들이 양보하지 않아서'(15.3%),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12.5%),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7.5%),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 때문에(5.1%) 등이 꼽혔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인은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갈등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갈등 발생의 원인

(단위: %)

원인	사례수	백분률
서로 자신만의 이익이나 주장만 앞세워서	895	59.7
기준에 가진 사람이나 집단들이 양보하지 않아서	229	15.3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서	188	12.5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112	7.5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 때문에	76	5.1

여러 사회갈등의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서 언론이 가장 책임이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응답자의 91%는 언론이 사회갈등에 책임이 크다고 인식한 반면 8.5%는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 0.6%는 책임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 다음으로 책임이 큰 집단이나 조직은 중앙정부, 여당, 야당, 대통령과 같은 정치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재계에 비교해서는 책임이 작지만 여전히 응답자의 55.5%가 시민단체도 책임이 크다고

인식할 만큼 사회갈등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러 집단 중 사회갈등에 대한 책임이 가장 작다고 인식되는 것이 학계와 종교계이다.

〈표 6〉 갈등의 책임 소재

(단위: %)

갈등의 책임소재	책임이 없다	보통	책임이 크다	평균값
언론	0.6	8.5	90.9	4.40
중앙정부	0.9	14.0	85.1	4.17
여당	1.1	17.8	81.1	4.12
야당	1.5	18.0	80.5	4.09
대통령	3.6	24.9	71.5	4.02
재계	1.8	23.0	75.2	3.97
지방정부(자치단체)	1.5	22.3	76.3	3.92
법조계	3.1	35.0	61.9	3.78
노동계	3.9	32.0	64.1	3.77
시민단체	8.5	36.1	55.5	3.62
학계	7.4	43.6	49.0	3.52
종교계	14.3	44.3	41.5	3.39

주 : 책임수준은 1='책임이 거의 없다', 2='책임이 없는 편이다', 3='뭘라 말하기 어렵다', 4='책임이 큰 편이다', 5='책임이 매우 크다'로 측정함.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집단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언론, 여당, 야당이 갈등발생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해소노력을 가장 하지 않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응답자의 70% 가량은 여당과 야당이 갈등해소를 위해 거의 노력하지 않고 있고 응답자의 64%는 언론도 갈등 해소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은 언론, 여당과 야당에 비교해서 갈등해소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러 집단 중에서 갈등해소 노력을 가장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시민단체이다. 응답자의 18%는 시민단체가 갈등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5. 집단갈등에 대한 견해

사회집단간 갈등은 그 발생원인, 순기능 또는 역기능, 해결방안, 정부의 역할 등에 관해서 개인별로 인식차가 크게 나타난다. 사회집단간 갈등이 사회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가 아니면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이나 세력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52.7%는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이나 세력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44.2%는 사회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사회집단간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라기보다는 관리를 잘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았다.

사회갈등의 순기능 또는 역기능과 관련하여 사회집단간 갈등이 잘 해결되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77.9%)이 갈등은 잘 해결된다고 해도 사회적 낭비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18.8%)보다 훨씬 컸다.

갈등해결의 방법과 관련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맡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48.9%)이 제3자에 의한 해결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40.5%)보다 약간 높았다.

갈등해결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정부가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50.9%)이 정부는 최소한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46.1%)보다 약간 높았다. 그리고 정치지도자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다소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50.9%)이 소기의 목표달성을 미루더라도 갈등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44.1%)보다 높았다.

정리하면 한국인은 사회집단간 갈등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갈등은 잘 관리하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갈등해결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부가 갈등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중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

제5장 한국인의 일상생활 갈등수준과 유형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가족, 친척, 이웃, 친구, 직장동료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생활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형은 다소 갈등이 있으나 만족하는 경우이다. 갈등이 있고 불만족한 경우는 소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계 유형에 따라 갈등수준과 만족도에 차이가 발견되는데 불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 유형이 부부관계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응답자의 62.1%는 만족한다고 보고한 반면 14.4%는 불만족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불만족 수준의 평균값이 2.46으로서 여전히 보통 수준 이하이기는 하지만 다른 관계의 평균값에 비교해서 높다. 반대로 가장 불만족 수준이 낮은 관계 유형은 친구관계로서 응답자의 63.6%가 만족하는 반면 7.4%만이 불만족하다고 보고 있다. 친구관계의 불만족 수준의 평균값은 0.97로서 다른 관계 유형에 비교해서 가장 낮다.

1. 가족 및 친척간의 갈등수준과 유형

가족 및 친척간의 갈등은 심리적으로 좋지 못한 감정이 지속되는 경우에서부터 심한 말다툼 등 감정이 상하는 말들이 오가는 경우, 생활이나 일에 심각한 피해나 지장을 주는 경우, 심지어 육체적 마찰이나 폭력이 수반되는 행동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가족 및 친척간의 갈

등 수준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위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지만 갈등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빈번한 갈등 유형은 심리적으로 좋지 못한 감정이 지속되는 경우이고 가장 드문 유형은 육체적 마찰이나 폭력적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가족 및 친척 유형에 따라서도 갈등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본인의 부모와 형제/자매간에 갈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갈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갈등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은 자녀, 손자손녀와의 관계이다.

〈표 9〉 가족 및 친척간의 갈등 수준과 유형

가족 관계	(단위: %)			
	생활이나 일에 심각한 피해나 지장을 받음	심리적으로 좋지 못한 감정이 지속됨	심한 말다툼 등 감정이 상하는 말들이 오감	육체적 마찰이나 폭력적 행동이 발생
누구와도 경험 없음	53.6	43.1	48.3	89.3
본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17.3	20.9	21.5	5.1
배우자	14.1	15.1	19.5	2.8
본인의 부모와 형제/자매 이외의 친척	10.7	11.5	8.0	1.7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9.1	10.7	4.4	1.1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이외의 친척	7.9	8.8	4.1	0.5
자녀, 손자손녀	2.8	2.5	4.1	0.2

가족 및 친척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응답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제시하는 것은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이다. 응답자의 26.8%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갈등을 겪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제시한 원인들은 '의견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심해서'(19.4%), '경제적 문제 때문에'(18.1%), '평소 대화 부족이나 대화 방법이 잘못 돼서'(13.9%), '성격 차이 등 심리적인 문제로'(13.4%) 등이다.

2. 이웃과의 갈등수준과 유형

가족 및 친척에 비교해서 이웃과의 갈등 수준은 낮다. 상대방 때문에 일이나 생활에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받은 응답자의 비율은 가족 및 친척의 경우에는 46.4%이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26.9%이다. 갈등 유형은 심리적으로 좋지 못한 감정이 지속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고 그 다음으로 일이나 생활에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이다. 이웃과 육체적 마찰이나 폭력적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소수이다.

이웃과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소음, 진동, 주차 등 생활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 응답자의 49.5%가 이런 생활상의 문제로 인해 이웃과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사소한 문제, 의견이나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이웃과의 갈등 수준과 유형

갈등 유형	(단위: %)	
	없다	있다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83.3	16.7
상대방 때문에 일이나 생활에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받았다	73.1	26.9
심리적으로 좋지 못한 감정이 지속되었다	68.7	31.3
심한 말다툼 등 감정이 상하는 말들이 오갔다	84.4	15.6
육체적 마찰이나 폭력적 행동이 발생했다	96.7	3.3

제6장 한국인의 갈등조정방식

한국인이 가족 구성원, 이웃, 직장 동료와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해결 방식의 예를 제시하고 각각의 방식을 사용하는 빈도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예로 제시한 방식에는 ① '되도록 상대방의 입장이나 의견을 받아들인다', ②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로 하여금 내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③ '가능하면 논쟁이나 토론을 피한다', ④ '서로 양보하여 타협을 시도한다', ⑤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다', ⑥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였다. 위의 6가지 유형들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끼리 묶어서 합의형, 자기주장형, 회피형, 제3자 활용형으로 분류하였다. 합의형에 해당하는 해결방식은 ①, ④, ⑤이고, 자기주장형은 ②이고, 회피형은 ③이고, 제3자 활용형은 ⑥이 해당한다.

각 유형의 활용 빈도를 측정한 결과 합의형이 가장 빈번한 갈등조정방식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6~28%가 가족 구성원과 갈등하거나 대립할 때 자주 서로 양보하여 타협을 시도하거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거나 되도록 상대방의 입장이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유형은 회피형으로 응답자의 21%가 자주 가능하면 논쟁이나 토론을 피한다고 보고했다. 자기주장형은 별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었다. 가장 덜 활용되는 유형은 제3자 활용형인데 응답자의 2.3%가 자주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보고하였고 71%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구성원과의 긴밀한 사적 관계에서는 갈등이나 대립이 생겼을 때 당사자들끼리 해결하지 외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이라는 매우 협소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는 가족 구성원과는 달리 이웃이나 동네 사람과는 심각한 의견 대립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현저하게 적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갈등조정유형은 역시 합의형이다. 두 번째로 사용되는 유형은 회피형이고 자기주장형은 별로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역시 제3자를 통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방식은 가장 덜 사용되었다.

〈표 11〉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조정방식

갈등조정 방식	(단위: %)			
	자주 그렇게 함	그렇게 한 경우 있음	거의 그렇게 하지 않음	갈등경험 없음
되도록 상대방의 입장이나 의견을 받아들인다.	25.8	60.5	10.7	3
서로 양보하여 타협을 시도한다	27.5	54.8	14.3	3.3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다	28	52.3	16.5	3.2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로 하여금 내 주장을 받아들여도록 한다	7.1	51.9	37.2	3.9
가능하면 논쟁이나 토론을 피한다	20.8	44.1	30.9	4.2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2.3	18.3	71.3	2.3

〈표 12〉 이웃과의 갈등조정방식

갈등조정 방식	(단위: %)			
	자주 그렇게 함	그렇게 한 경우 있음	거의 그렇게 하지 않음	갈등경험 없음
되도록 상대방의 입장이나 의견을 받아들인다.	11.5	35.7	4.1	48.7
서로 양보하여 타협을 시도한다	14.4	34.4	3.5	47.8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다	15.5	33.5	3.7	47.3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로 하여금 내 주장을 받아들여도록 한다	2.2	23.6	24.4	49.8
가능하면 논쟁이나 토론을 피한다	12.7	27.4	10.9	49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2.4	16.8	29.4	51.3

직장은 가족 못지않게 협소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고 직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동료들과 의견 대립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갈등조정유형은 합의형이다. 그 다음으로 회피형이 자주 사용되고 자기주장형과 제3자 활용형은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통한 해결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당사자간 해결이 쉽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럴 경우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인가에 대해서는 갈등영역이 공공영역인지 사적영역인지에 따라 인식이 달라진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국가기관이나 국가정책과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문가 등 제3자를 통한 조정과 화해가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으로 인식되고 그 다음으로 법적 해결이 모색된다. 사기업이나 사적 기관과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전문가 등 제3자를 통한 조정과 화해가 우선적으로 추구되고 그 다음으로 법적 해결이 모색된다. 하지만 이웃간의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끝까지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으로 전문가 등 제3자를 통한 조정과 화해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해결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이웃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는 그다지 선호되지 않는 해결방법으로 나타났다.

〈표 14〉 당사자간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의 갈등조정방식

(단위: %)

갈등조정 방식	국가기관이나 국가정책	사기업이나 사적 기관	이웃
그래도 끝까지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11.2	12.6	60.3
비합법적 방법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한다	5.3	6.3	5.8
전문가 등 제3자를 통한 조정과 화해를 시도한다	54.1	45.9	24.1
법적으로 해결한다	29.5	35.2	9.8

제7장 한국인의 공익의식

앞서 지적하였듯이 한국사회에서 갈등이 만연하고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데는 갈등 당사자들간에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합의하고 조율하려는 의식과 능력이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족주의, 연고주의, 집단주의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집단이기주의로 변모하여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해당사자 간에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합리적인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에 의거한 갈등조정과 해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집단이기주의를 넘어서 공공선을 인정하고 추구하려는 공익의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희섭(2007)이 지적하듯이 한국사회가 선진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신민과 대중과 민중을 넘어서서 법치주의와 공익정신, 그리고 탈계급적 공동체의식을 내면화한 보편적 시민으로 성숙해야 한다.

앞의 선행연구 검토부분에서 지적하였듯이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공익에 대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논의는 있어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작화하여 갈등연구에 적용한 사례는 매우 적다.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공익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구성하고 이 척도를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공익의식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공익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공익과 사익이 상충되는 상황에 관한 8개의 진술을 제시한 후 각 진술에 대해 응답자가 동의하는 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 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우선 긍정적 내용의 진술에 대한 공익의식 수준을 살펴보면 “공공의 이익이라면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진술에 대해 34.1%가 동의한 반면 21.5%가 동의하지 않아서 공공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에 우선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재산세를 공공세로 과세하는 것이나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즉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하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개인에게 재정 부담이나 손해가 생기게 되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다음으로 부정적 내용의 진술에 대한 공익의식 수준을 살펴보면 대체로 보통 수준 이상의

공익의식을 보인다. 예를 들어 “사회에 피해가 되더라도 내 직장에 이익이 된다면 협조할 것 같다”는 진술에 대해 14%가 동의한 반면 39.7%는 반대했다.⁵⁾ “뇌물을 주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뇌물을 줄 것 같다”는 진술에 대해 24.7%가 동의한 반면 45.3%는 반대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지원자가 동향, 학교 동창, 또는 친척이라면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릴 것 같다”는 진술에 대해 26.3%가 동의한 반면 33.7%는 반대했다.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기는 것을 목격하더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모른 채 넘어갈 것 같다”는 진술에 대해 19.7%만이 동의한 반면 38.7%가 반대했다. 즉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경우에는 비록 개인과 자신의 집단에 이익이 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안전한 시설이라도 우리지역의 집값을 떨어뜨린다면 반대할 것이다”라는 진술에 대해 30.9%가 동의한 반면 26.1%는 반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에서는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익의식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살펴본 결과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 이상의 공익의식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재산세의 분배, 사회복지 목적의 세금, 사회협오시설로 인한 집값 하락 등과 같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의 공익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한국인들이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익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자신과 자기 집단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보여준다.

5) 이런 결과는 오만석 외(2001)가 한국·미국·일본 국민의 윤리의식 비교연구에서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한국인과 일본인은 각각 71.9%, 79.4%로 긍정하고 8.3%와 7.7%는 부정한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반면 미국인은 3.7%만이 긍정하고 85.3%는 부정하였다. 오만석 외는 이런 결과를 두고 한국인과 일본인이 미국인에 비해 훨씬 집단 이기주의적 경향이 강하다고 해석했다. 본 연구 결과와 오만석 외의 연구 결과의 차이는 표본과 조사방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오만석 외의 결과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집단 이기주의 수준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표 15〉 한국인의 공의의식 수준

(단위: %)

문항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평균값
공공의 이익이라면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21.5	44.4	34.1	3.13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이 재산세를 공동세로 과세한 후 인구수대로 배분하는 것이 옳다	40.3	32	27.7	2.81
사회복지를 위해 나는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32.9	41.4	25.7	2.86
사회에 피해가 되더라도 내 직장에 이익이 된다면 협조할 것 같다	39.7	46.3	14	3.31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기는 것을 목격하더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모른 채 넘어갈 것 같다	37.7	45.6	16.7	3.27
뇌물을 주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뇌물을 줄 것 같다	45.3	30.1	24.7	3.35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안전한 시설이라도 우리 지역의 집값을 떨어뜨린다면 반대할 것 같다	26.1	43.1	30.9	2.97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지원자가 동향, 학교 동창, 또는 친척이라면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릴 것 같다	33.7	40	26.3	3.15

주 1: 동의 수준은 1='매우 동의하지 않음', 2='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 4='대체로 동의', 5='매우 동의'로 측정함.

주 2: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진술에 대한 응답 점수는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의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냄.

주 3: 평균값이 높을수록 공의의식 수준이 높을 것을 의미함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민주화 이후 그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억압되었던 각종 이해집단들의 욕구와 불만이 분출하면서 한국사회는 갈등의 확산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런 사회갈등을 합리적인 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갈등관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사회 전체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사회갈등은 잘 해결하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사회를 통합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관리 관련 법, 제도, 절차 등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시스템 차원의 접근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갈등조정문화를 만들어가는 의식문화적 접근이 동시에 전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갈등에 관한 의식과 갈등해결방식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갈등이 만연하고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데는 갈등 당사자들간에 자

발적이고 민주적으로 합의하고 조율하려는 의식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1,500명의 한국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인의 갈등에 대한 의식, 일상생활에서의 갈등수준, 갈등해결방식, 공익의식의 수준과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인은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수준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2%에 불과하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6.7%,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91.1%에 달했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89% 포인트에 달했다. 더욱이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사회갈등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완화되었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

사회갈등 영역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는 계층간 갈등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 지역갈등, 노사갈등, 이념갈등, 정부-지역주민 갈등, 세대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갈등을 해결하려는 범사회적 차원의 노력은 우선적으로 계층간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 외에 이념간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경제개방(한미 FTA 등)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자, 환경보호자와 환경개발자간의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인은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서로 자신만의 이익이나 주장만을 앞세우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한국인들이 압축적 근대화를 겪으면서 전통적 연고주의와 온정주의를 유지한 채 보편적 시민의식을 내재화하지 못한 것이 사회갈등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국인들도 동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갈등의 책임소재에 대해서 언론이 가장 책임이 큰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중앙정부, 여당, 야당, 대통령과 같은 정치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갈등에 대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여당, 야당은 갈등해소 노력을 가장 하지 않은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대통령은 언론, 여당과 야당에 비교해서 갈등해소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러 집단 중에서 갈등해소 노력을 가장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시민단체이다.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고 국가부문과 시장부문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할 때 한국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공익차원의 갈등조정형적인 시민단체들의 역할을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사회갈등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회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이나 세력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즉 사회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라기보다는 관리를 잘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회갈등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잘 해결되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등이 잘 해결되어도 사회적 낭비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많았다.

갈등해결의 방법에 대해서는 갈등영역이 공공영역인지 사적영역이지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진다. 국가기관이나 국가정책과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문가 등 제3자를 통한 조정과 화해가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으로 인식되고 그 다음으로 법적 해결이 모색된다. 사기업이나 사적 기관과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전문가 등 제3자를 통한 조정과 화해가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그 다음으로 법적 해결이 모색된다. 하지만 가족이나 이웃간의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끝까지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으로 전문가 등 제3자를 통한 조정과 화해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갈등의 경우에 전문가 등 제3자에 의한 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갈등조정 전문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들의 양성과 활용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 질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갈등을 합의에 의거해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주체들이 사익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공익의식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인들은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 이상의 공익의식을 보이고 있지만 특별히 재산세의 분배, 사회복지 목적의 세금, 사회협오시설로 인한 집값 하락 등과 같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의 공익의식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는 한국인들이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익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자신과 자기 집단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차원의 갈등조정형적인 시민단체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민주노총과 같은 집단이익추구형, 경실련과 환경연합과 같은 사회운동형,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같은 지원형적인 시민단체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국가와 자본,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전횡으로부터 사회약자층을 보호하고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시민단체들이 활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단체들이 사회의 제3섹터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별 사회집단들 위에 서서 공익적 차원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지원형적 시민단체들과 지역종합사회복지관들에 갈등조정 기능을 추가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 가정법률상담소, 이주노동자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은 상담, 교육, 의료 지원, 긴급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원 기능만을 수행해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부, 한국인 사용자와 외국인 피고용자 등과 같은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지원형적인 시민단체들과 종합사회복지관들에 갈등조정사 또는 갈등조정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보다 전문화된 갈등 조정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갈등조정공익재단'(가칭)과 같은 민간기구를 설립하여 다양한 갈등주체들간의 갈등을 전문가들이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다양한 사회갈등을 이해·분석하고 갈등을 조정·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시행중인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이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

서는 법에서 제시된 갈등영향분석,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의 진행,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될 실용전문인력과 사회갈등을 학문적으로 진단·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능력을 갖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중심대학과 국책연구원 및 교육기관에서 갈등연구조정센터를 설립하고 갈등연구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갈등연구조정학회’(가칭)와 같은 연구자 및 조정전문가들이 학술단체를 설립하여 갈등연구 및 조정기술을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문화된 갈등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국가 또는 학회가 갈등조정사 또는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증을 부여하여 갈등조정인력의 자격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익에 대한 국민의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포함한 동양적 사고에서는 공익과 사익이 별개의 것이며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사익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것으로서 공익을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서양의 공화주의에서는 공익을 사익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한 차원 높은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사익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개명된 사익(enlightened self-interest)이 공익이라고 인식한다(박세일, 2001).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가 보장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공익과 사익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공익을 위해 사익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통적인 사고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공화주의적 공익의식을 국민들이 내재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사익을 초월한 공익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박세일(2001)은 전문가들(학자 등의 이론전문가와 전문경영인, 기술관료 등의 실무전문가)이 공익이 무엇인지를 조사 연구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전문가들의 판단과 정책제안을 놓고 국민다수가 참여하는 개명된 공론화(public deliberation) 과정을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개명된 공론화란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신들의 사적 이익주장을 자제하고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공익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 민주적으로 진술하는 것”이다(전계서, 68). 필자는 박세일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고 앞으로의 공공갈등 해결방식으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에 의한 문제해결의 제시와 이후의 공론화 과정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부대운하 건설사업에 적용해보면 첫 번째로 환경, 건설, 경제전문가들이 대운하 건설의 가능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객관적, 실증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두 번째로 이를 놓고 국민다수가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결정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규정, 『신행정학개론』 (제3개정판), 법문사, 1973.
- 김동영, “한국의 공공갈등해결 분야의 발전에 대한 비전,” 고려대 사회학 콜로키움 발표문, 11월 14일, 2006.
- 김비환, “영미 자유주의사상에서의 공익 개념과 한국에서의 함의,” 『철학과 현실』 50호: 36-48, 2001.
- 김상학,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1호: 169-206, 2004.
- 김종길, 『접속시대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 김혜숙,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 35-50, 2002.
- 박기덕, “한국정치의 갈등 분석과 해소 방안의 모색: 지역, 계층 및 이념 갈등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6권(1호), 237-267, 2002.
- 박길성, “외환위기의 사회적 비용: 삶의 질, 사회갈등, 사회구조,” 『비교사회』, 5호, 105-128, 2003.
- 박세일, “공공선(공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철학과 현실』 가을호(통권 제50호): 61-74, 2001.
- 박종주·김성관·손충기·심대섭,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공익성 실태분석 연구-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9호: 71-91, 1992.
- 서문기 외,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에 대한 이해』, 삼성경제연구소, 2004.
- 손호철,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 『남남갈등진단 및 해소방안』, 경남대학교 통일관 개관기념학술회의 자료집, 2004.
- 양정혜,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한국언론학보』, 45집 (2호): 284-315, 2001.
- 오만석·도성달·박찬구·추병완, “한국·미국·일본 국민의 윤리의식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11권(1호): 29-78, 2001.
- 윤인진·송영호, “한국인의 소수자 및 다문화 관련 태도의 비교분석,”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 강원대학교, 12월 14~15일, 2007.
- 이승환, “한국 및 동양 전통에서 본 공과 공익,” 『철학과 현실』, 50호: 24-35, 2001.
- 임희섭, “한국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46집, 189-221, 2007.
- 조한범,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5.
- 주성수, “시민참여, 자치권능, 심의민주주의제도: 정책갈등해결방안의 탐색,” 『경제와사회』, 63권, 124-147, 2004.
- 최상진·김기범·Susuma Yamaguchi, “한국문화에서의 사회정의와 집단 지향성,” 『사회과학연구』 11권, 133-152, 1998.
- 최창호, “공익의 본질,” 『한국행정학보』, 12권, 218-228, 1973.
- 한국여성개발원,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해소방안 연구』, 2005.
- 한국여성개발원, 『국내갈등관련 법·제도 분석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2005.
- 한국여성개발원, 『환경갈등 현황 및 정책과제』, 2005.
- 한준·설동훈, 『한국의 이념갈등 현황 및 해소방안』, 한국여성개발원·한국사회학회, 2006.

- 황정미,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인종적 배제주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대한상공회의소, 9월 13일, 2007.
- Burgess, Heidi, and Guy M. Burgess, "What Are Intractable Conflicts?," *Beyond Intractability*, edited by Guy Burgess and Heidi Burgess, Conflict Research Consortiu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Colorado, USA. (<http://www.beyondintractability.com/action/articles.jsp?nid=5064>), 2003.
- Burton, John, *Conflict: Resolution and Preven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 Gans, Herbert, *Urban Villagers*. New York, Free Press, 1968.
- LeBaron, Michelle, "Culture and Conflict," *Beyond Intractability*, edited by Guy Burgess and Heidi Burgess, Conflict Research Consortiu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Colorado, USA. (<http://www.beyondintractability.com/action/articles.jsp?nid=5064>), 2003.
- Ross, Marc Howard, *The Management of Conflict: Interpretations and Interes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95.
- Morris, Michael W., Katherine Y. Williams, Kwok Leung, Richard Larrick, M. Teresa Mendoza, Deepti Bhatnagar, Jianfeng Li, Mari Kondo, Jin-Lian Luo, Jun-Chen Hu, "Conflict Management Style: Accounting for Cross-Na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9, No.4, 729-747, 1998.
- Deutsh, Morton, *The Resolution of Conflic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3.